

FIP-2009-0041 (통권 제165호, 2009. 12. 18)

#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 .....	1
1. 지표로 보는 사회갈등 .....	1
2. 주요 갈등 현황 .....	2
II. 기업의 사회갈등 인식 조사 .....	7
1. 기업이 보는 사회갈등 현황과 문제점 .....	7
2. 사회갈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8
3. 기업의 사회갈등 예측과 바라는 점 .....	10
III. 시사점 .....	12
< 참고 > 해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 .....	13
< 첨부 > 기업 대상 설문 문항 및 결과 .....	16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대외협력팀 조운석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450    FAX : 6234-5399    E-mail : yscho@fki.or.kr



## 1. 한국의 사회 갈등 양상

- 사회갈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후진적 모습을 나타냄
  -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사회갈등지수<sup>1)</sup>가 높고, 집회·시위건수 및 폭력집회의 횟수 역시 2007년 이후 증가 추세
- 이념갈등 : 민주화 이후 사회는 과잉 이념화되며 민주·반민주에서 보수·진보의 구도로 바뀌었고 좌파정권 10년간 진보의 목소리가 강해짐
- 빈부갈등 : 빈부격차 확대가 사회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상대적 빈곤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반기업정서, 평등 이념 자극 우려 존재
- 노사갈등 : WEF, IBRD 등의 평가에서 여전히 후진적 노사관계를 나타내며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집단의 불법 노동운동이 지속
- 정치갈등 : 18대 국회 폭력사태로 7억원의 세금낭비 및 170여일의 공전일수가 발생하는 등 대화와 토론, 타협의 원칙이 훼손

## 2. 기업의 사회갈등 인식 조사

\* 조사기간 : 2009. 11. 2 ~ 2009. 11. 6

\* 조사대상 : 312개社 응답/585개社(각 산업별 매출액 상위 기준) 조사

\* 조사목적 : 국내기업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및 갈등으로 인한 피해 분야 파악

- 응답기업의 87.3%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
  - 매우 심각(15.0%), 다소 심각(72.3%)이 별로 심각하지 않음(12.7%)을 앞섬
- 사회갈등의 최대 요인은 정치·이념대립(63.7%)→빈부격차 심화(24.9%)→노사대립 심화(11.3%) 順
- 사회갈등은 매출감소와 직결(21.3%)되고 신인도 및 이미지 추락(19.7%),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 포기(12.3%), 신규채용 위축(10.3%)에 영향
  - 기타 피해 : 기업상황을 고려치 않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특정신문 광고게재 항의, 물류 정체 등
- 경영에 가장 큰 피해주는 갈등은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30.8%)
  -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 다음으로 사회 내 정치·이념대립(22.4%)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16.4%)→개발과 환경가치 갈등(15.7%) 順

1) 사회갈등지수 : 갈등발생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수준을 파악하는 지수,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 ● ● 요약 ● ● ●

- 갈등이 기업경영에 주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불확실성 심화(32.7%)
  - 기업경영 불확실성 심화(32.7%)→반기업정서 확산(19.0%)→국회,정부 활동 지연(18.3%)→불법 노동운동 야기(17.7%) 順
- 응답기업들은 2010년도 사회갈등이 올해와 비슷할 것(59.7%)으로 예측
  - 올해와 비슷할 것(59.7%), 다소 더 나빠질 것(23.7%), 매우 더 나빠질 것(2.0%)이 다소 좋아질 것(14.6%)을 앞섬
- 정치·이념갈등 해소(32.3%)를 사회통합 최우선 과제로 꼽음
  - 그 외에 정부의 소통노력(27.8%)→선진노사문화 정립(12.1%)→사회안전망 구축(9.3%)→시티즌십 강화(8.0%) 順

### 3. 시사점

- 기업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우려할 수준에 달해 있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
  - 후진적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정치이념 대립 등이 매출액 감소, 투자위축, 해외신인도 추락, 신규채용 감소 등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
- 기업들이 내년도(2010년) 사회갈등이 올해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투자 마인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우리 기업들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모적 이념갈등 해소, 정부의 소통능력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
-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규제개혁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과제라는 인식 확산이 요구

### < 참고 > 해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

- 미국 : 경제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극복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법률과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여러 갈등에 효과적 대응
- 네덜란드 : 오일쇼크, 마이너스 경제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협약인 '바세나협약'을 통해 서로 양보해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탄력
- 아르헨티나 :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운동을 자극함으로써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 고도화 실패

# I.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

## 1. 지표로 보는 사회갈등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sup>1)</sup> 수준은 OECD 27개 회원국 중 4번째<sup>2)</sup>로 높음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0.71)<sup>3)</sup>는 OECD 27개 회원국 중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로 높음
  - 미국(0.44), 일본(0.42), 영국(0.38), 프랑스(0.38), 독일(0.36), 네덜란드(0.29) 등 선진국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과 대비
  -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는 것은 민주적 갈등관리 제도 부재, 정부의 갈등 제어능력 미흡을 의미
- 사회갈등 수준의 대표 척도인 집회·시위와 폭력시위 건수 모두 200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집회·시위 건수는 '07년 1만 1,904건→'08년 1만 3,406건으로 약 13% 증가했고 시위참가자수도 같은 기간에 232만 7,608명에서 308만 2,069명으로 약 32% 증가
  - 폭력시위도 '01년 215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07년 64건, '08년 8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금년 8월 현재, 42건)

< 불법 과격·폭력시위, 부상자 현황<sup>4)</sup> >

(단위 : 건,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집회·시위 횟수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11,904	13,406
불법폭력 시위횟수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64	89
경찰관 부상자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202	577

\* 자료 : 경찰청

1) 사회갈등은 사회집단이 사회적 지위, 희소한 자원 등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의식하며 서로 경쟁하는 상태로 정의함 Oberschall, A (1978) Theories of Social Conflic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출처 :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사회갈등지수 : 갈등발생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수준을 파악하는 지수로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지수와 정부효과성지수의 평균으로 나눠 구함.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사회갈등지수 =  $\frac{\text{소득불균형지니계수}}{\text{민주주의지수} + \text{정부효과성지수} / 2}$ )

민주주의 지수 : 행정수반의 선출, 행정권 제한, 정치적 경쟁 등 세가지 차원에서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Polity IV project :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7)

정부효과성 지수 : IBRD가 1996년부터 정책의 효과성, 정부의 업무수행능력, 규제외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

4) 불법폭력시위는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 = 불법폭력시위건수/전체 집회발생건수 \* 100), 경찰부상자는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당한 경찰 및 전의경 인원 합계

## 2. 주요 갈등 현황

### 1) 이념갈등 : 사회의 과잉 이념화(化)

-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면 아래에 잠재해있던 우리 사회의 좌우 갈등의 가능성이 오히려 전면으로 부상
  - ‘제3의 길’ 등 탈이념화를 통해 이념 대결을 종결하고 다른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 민주화 정착은 다양한 생각과 이념들의 공존을 의미하나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결여가 원인
- 과거 반민주-민주의 구도가 좌-우, 보수-진보 구도로 새롭게 재편
  - 미국산 쇠고기 수입, FTA 체결, 미디어법,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여러 사례에서 이념갈등 양상 표출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 집회

- 지난 한 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 내 여러 부분들을 관통하며 이념갈등 양상으로 수렴
  - 법질서 경시, 공권력 부재, 광고불매운동, 민노총과 전교조 등의 이념집단과의 융합, 전문시위세력 등 갈등 이면의 여러 모습 노출
  - 한반도 대운하, 교육정책 거부, 정권퇴진 등 미국산 쇠고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의견을 내며 여론몰이
- 106일간의 촛불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만 3조 7천억원<sup>5)</sup>에 달할 정도였고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시위장소 인근 영업손실 9,378억원, 총파업 생산손실 356억원, 사회불안정 손실 1조 8,378억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경찰 폭행, 언론사 습격, 과잉진압 논란 등으로 한국은 대외적으로 ‘시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되었음

- 진보 정권 10년 동안 진보의 목소리는 강해졌지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대결 문화로는 자리잡지 못함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좌파 성향의 정부수립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생성
  -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여전히 거리 시위문화로 해소되고 있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5) 출처 :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 시위 사건 수사백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본 데이터는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8에서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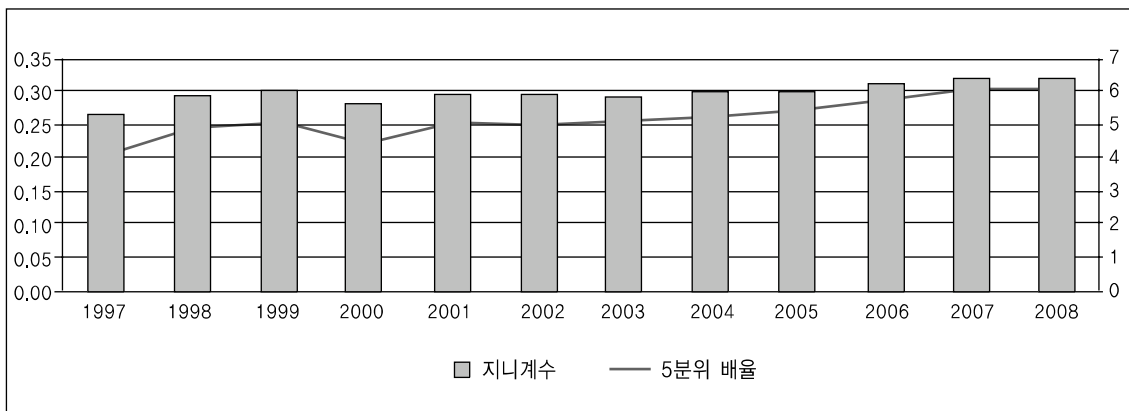


## 2) 빈부갈등 : 빈부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갈등 심화

-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정권 10년 이후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
  - IMF 외환위기 후,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
  - 지니계수<sup>6)</sup>, 소득 5분위 배율<sup>7)</sup> 등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점차 커지는 추세

<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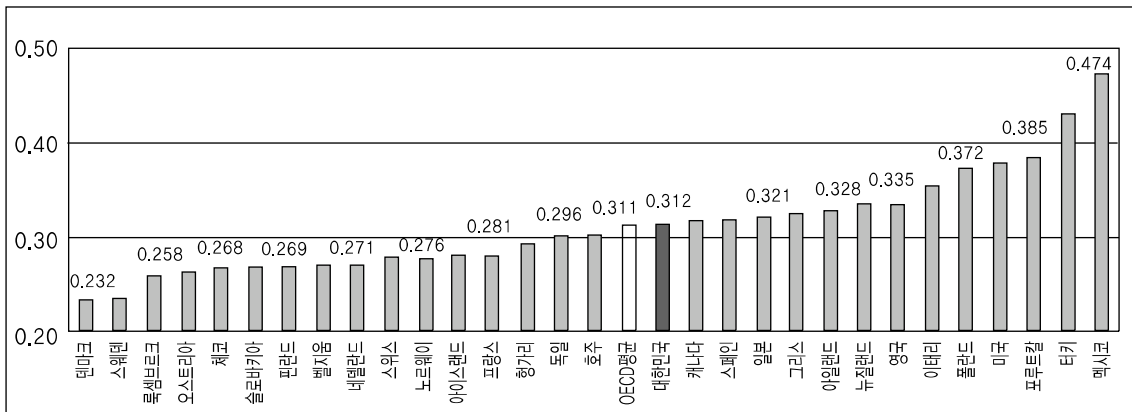
(5분위배율 단위 : 배)



\* 주: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소득5분위배율

\* 출처 : 통계청

< 세계 주요국의 지니계수 비교 >



6)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서 정의.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 의미. 예를 들어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짐), 그리고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과 일치한다(한 사람이 전부의 소득을, 나머지 사람은 0의 소득을 가짐)

7)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 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 숫자가 클 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 과거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던 시기에서 삶의 질,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음
  - 주관적 행복보다 타인의 시선, 분위기에 더 치중하는 사회적 풍토 역시 빈부갈등의 양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

< 연도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변화 추이 >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절대적 빈곤율 <sup>8)</sup>	7.6	6.5	5.2	6.1	6.1	6.5	5.7	-
상대적 빈곤율 <sup>9)</sup>	9.8	10.6	10.3	11.3	12.0	12.3	12.5	13.0

\* 출처 : 통계청

< 2005년 주요국가의 상대빈곤율 비교 >

(단위 : %)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일본	미국	한국('06)	OECD 평균
5.3	6.8	7.1	9.4	14.9	15.3	14.6	10.8

\* 출처 : OECD(1인 및 농가포함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

- 빈부격차는 빈부갈등으로 커져 반(反)부자정서, 반(反)기업정서를 자극 및 좌파 이념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음
  - 빈곤계층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 법질서 경시 풍조, 체제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 위화감 조성 가능성
  -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반재벌로 대표되는 반기업정서가 강화, 평등의 가치가 확산될 우려

### 3) 노사갈등 : 후진적 노사관계 지속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EF(세계경제포럼)의 지난 9월 실시한 국가경쟁력평가 노동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33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함

8) 빈곤은 경제력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절대적 빈곤율 :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9)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기준(OECD 기준)

세부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사간 협력	81	114	55	95	131
고용의 경직성	-	-	50	65	92
고용 및 해고관행	41	66	23	45	108
해고 비용	-	-	107	108	109

\* 조사국가 수 : 2005년 117개국, 2006년 125개국, 2007년 131개국, 2008년 134개국, 2009년 133개국

\* 출처 : WEF 국가경쟁력 평가

- IBRD(세계은행)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용경직성, 근로시간경직성, 해고비용 등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

세부항목	순 위		지 수		
	2008	2009	2008	2009	OECD 평균
고용경직성	124	126	44	44	26.5
근로시간경직성	138	122	60	40	30.1
해고경직성	79	85	30	30	22.6
해고비용	155	154	91	91	26.6

\* 조사국가 수 : 2008년 181개국, 2009년 186개국

\* 세계은행 노동분야의 지수는 낮을수록 유리,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변경으로 근로시간경직성 지수 변화

\* 세계은행 고용경직성 : 정규직 업무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 금지 여부, 기한부 고용계약 최대 기간, 근로자 평균 부가가치에 대한 신입 최저임금 비율

\* 세계은행 근로시간경직성 : 주중 50시간 이상 근무가능 여부, 1주일 최대근무 가능일수, 야간 및 주말 근무 제한 여부, 20년 근무자의 유급연차휴가

\* 세계은행 해고경직성 : 해고의 법적 인정여부, 제3자에게 해고 통보 여부, 제3자에게 해고 승인 여부, 해고 전에 배치전환 의무 여부, 해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여부, 재고용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여부

\* 세계은행 해고비용 : 20년 근무자 해고통지 기간 및 해고비용, 해고할 경우 벌금

\* 출처 : IBRD

- 지난 7월 쌍용차 사태는 노동운동에 대한 사측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불법·폭력 노동운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

- 100일 넘게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는 회사의 자구책에 대해 단 한 명의 해고도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며 버티기에 돌입
- 정부는 불개입 방침을 내세우며 노조를 더욱 고립시켰고 사측 역시 원칙적 대응으로 맞서 결국 노조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냄

-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운동 집단과 산별노조가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의 노사문화는 선진 노사문화 정립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 초래

- 산별노조는 화물연대, 금속노조 등의 연대파업 등 파업의 세를 불리고 민주노총 등 노동집단은 노동과 관련없는 이슈에 대해서도 실력 과시

#### 4) 정치갈등 : 여야간 소모적 대립이 여전

- 18대 국회 폭력사태로 7억원 세금 낭비 및 170여일의 공전일수 발생
  - 여러 논의를 수렴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간 폭력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수가 7억 1,700만원에 달함<sup>10)</sup>
    - 기물 파손, 폐쇄회로TV 설치, 모니터 상황실 설치, 회의장 잠금장치, 창문 교체 등에 따른 비용
  -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인해 18대 국회는 2009년 9월까지 170일의 공전 일수를 기록함(회기일수 : 328일, 15대 국회 공전일수 : 256일)
- 대화와 토론,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칙이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날치기, 장외투쟁, 의장석·본회의장 점거, 경호권 발동 등의 구태적 모습이 회기를 거듭하며 되풀이됨
  - 정당 간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찾고 표결에 부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야당, 소수정당의 물리력 행사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10) 출처 : 국회사무처

## II. 기업의 사회갈등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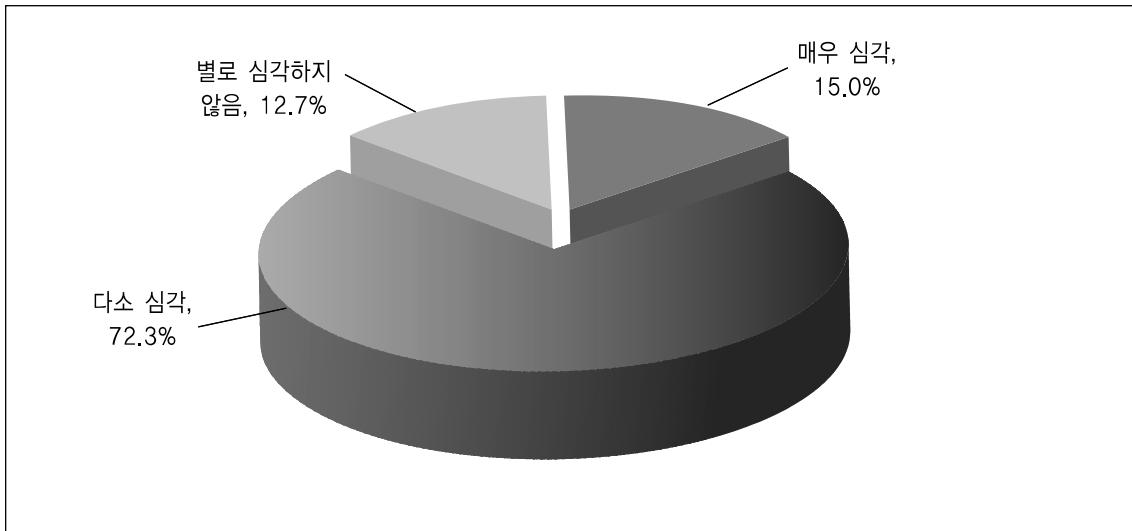
### <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국내기업의 사회 내 갈등에 대한 인식 및 갈등으로 인한 피해 분야 파악
- 조사내용 : 주요 갈등 분야,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주는 영향, 내년 사회갈등 예상 등
- 조사대상 : 585개社(산업별 매출액 상위 기준)  
312개社 응답(응답률 53.3%)
- 조사기간 및 방법
  - 기간 : 2009. 11. 2~2009. 11. 6
  - 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

### 1. 기업이 보는 사회갈등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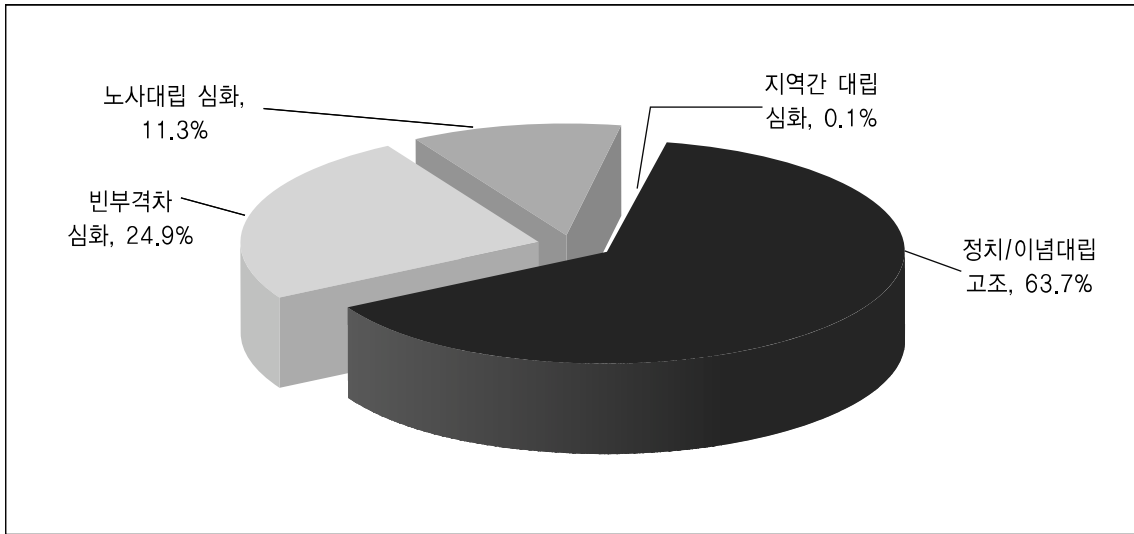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87.3%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
  - 응답 기업 중 각각 72.3%와 15.0%가 올 한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소 심각, 매우 심각했다고 답해 별로 심각하지 않음(12.7%)을 크게 앞섬

< 올해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



- 사회갈등 최대 요인 : 정치·이념 대립→빈부격차 심화→노사대립 順
  - 기업들은 올해 사회갈등을 야기한 최대 요인을 정치·이념 대립(63.7%), 빈부격차 심화(24.9%), 노사대립 심화(11.3%)順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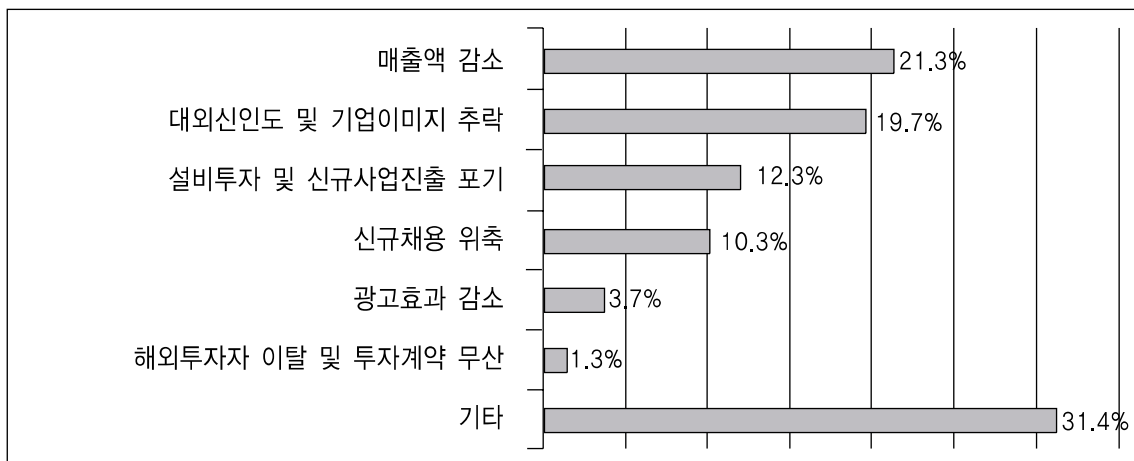
< 사회 갈등 야기 최대 요인 >



## 2. 사회갈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응답업체의 21.3%가 사회갈등이 매출액 감소와 직결된다고 응답
- 사회갈등이 기업에 주는 피해로 매출액 감소(21.3%)→신인도 및 이미지 추락(19.7%)→설비투자 및 신규사업 포기(12.3%)→신규채용 위축(10.3%)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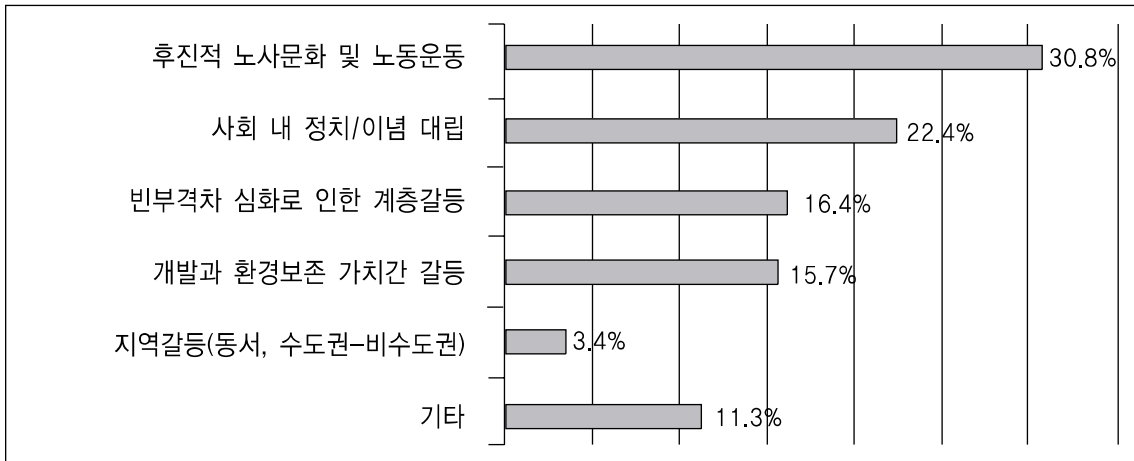
< 사회갈등으로 기업이 입은 가장 심각한 피해 분야 >



- 이밖에도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특정신문 광고 게재에 대한 항의, 소비성향 변화 불확실, 물류 정체,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 사례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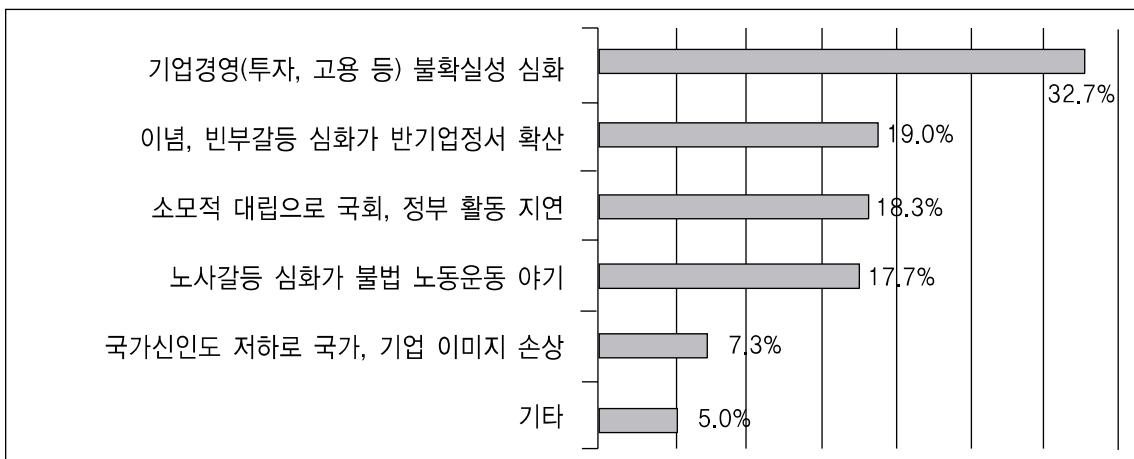
- 기업경영에 가장 큰 피해주는 갈등요인으로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30.8%)을 꼽음
  -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30.8%)→사회 내 정치 이념 대립(22.4%)→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16.4%) 順

< 기업경영에 가장 큰 피해주는 갈등 >



-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이유로 기업경영 불확실성 심화(32.7%)를 지적
  - 이밖에 이념·빈부갈등 심화에 따른 반기업정서 확산(19.0%)→소모적 대립에 의한 국회·정부활동 지연(18.3%)→불법노동운동 야기(17.7%)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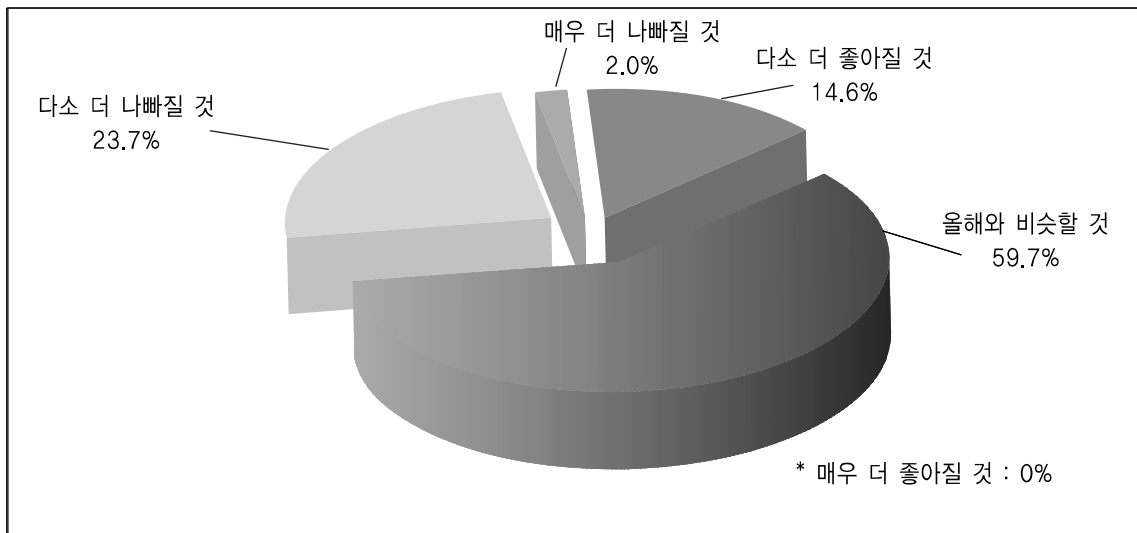
<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주는 주 이유 >



### 3. 기업의 사회갈등 예측과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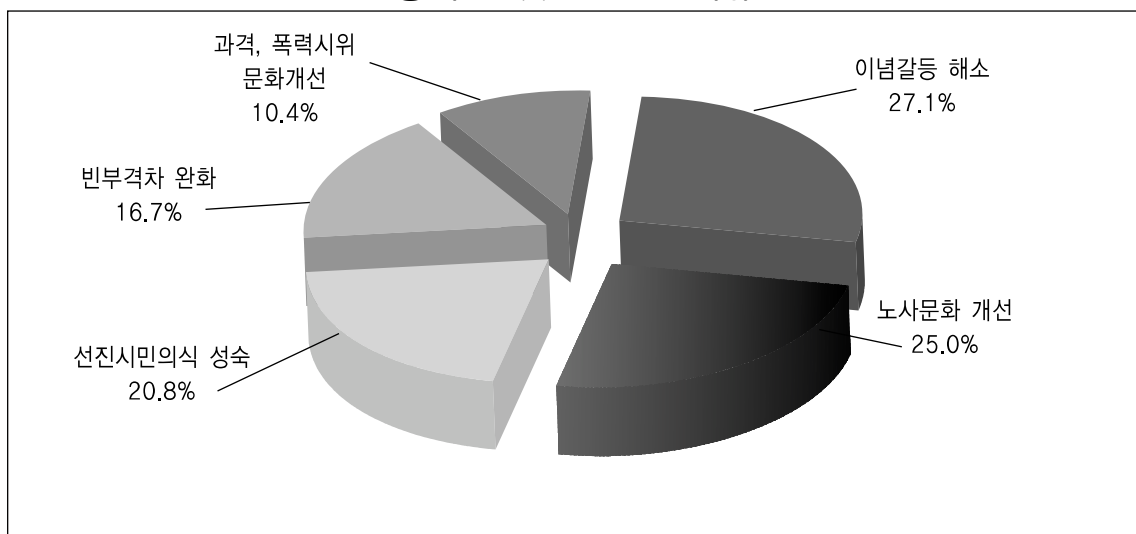
- 내년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85.4%)
  - 올해와 비슷(59.7%), 다소 더 나빠질 것(23.7%), 매우 더 나빠질 것(2.0%)에 비해 다소 더 좋아질 것은 14.6%에 불과

< 2010년도 우리 사회 갈등 양상 전망 >



- 내년도 사회갈등 양상이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념갈등 해소(27.1%)→노사문화 개선(25.0%)→선진시민의식 성숙(20.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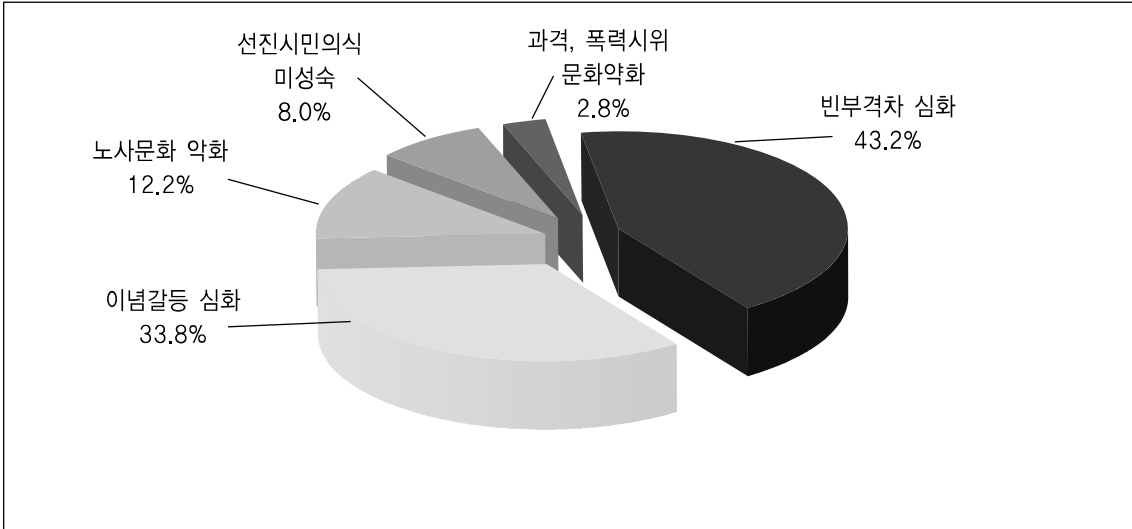
< 좋아질 것으로 본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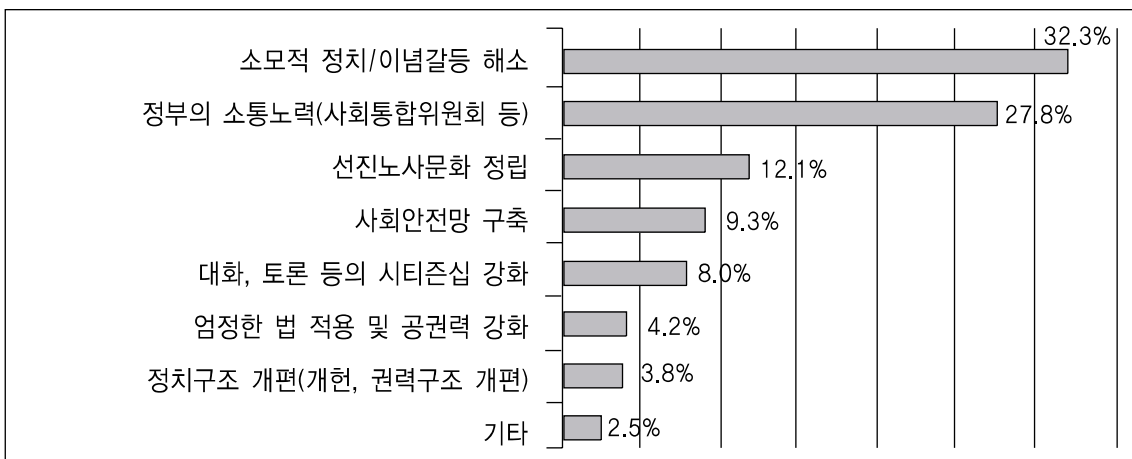
- 내년도 사회갈등 양상이 나빠질 것으로 본 응답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빈부격차 악화(43.2%)→이념갈등 심화(33.8%)→노사문화 악화(12.2%)→선진시민의식 미성숙(8.0%) 順으로 응답

< 나빠질 것으로 본 이유 >



-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모적 이념갈등 해소(32.3%)→정부의 소통노력(27.8%)→선진노사문화 정립(12.1%) 順
- 이밖에도 응답기업들은 사회안전망 구축(9.3%), 시티즌십 강화(8.0%), 엄정한 법 집행 및 공권력 강화(4.2%)를 과제로 꼽음

<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 >



### Ⅲ. 시사점

- 기업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우려할 수준에 달해 있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
  - 사회갈등이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반기업정서 확산, 불법노동운동을 야기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방해
  - 특히 후진적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정치이념 대립 등이 매출액 감소, 투자위축, 해외신인도 추락, 신규채용 감소 등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기업들이 내년도(2010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올해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회갈등이 여전히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될 전망
  - 내년에도 정치이념 갈등 지속, 빈부격차 확대에 의한 양극화 심화, 노사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사회갈등이 경제회복의 최대 관건인 기업의 투자 마인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여전
  
- 우리 기업들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모적 이념갈등 해소, 정부의 소통능력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
  - 정부와 국회는 정치·이념 갈등 해소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화 정치 구현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에 노력해야 함
  - 생산손실, 매출액 감소 등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는 후진적 노동 운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선진노사문화를 정립해야 함
  - 노사정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갈등을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와 직결되는 부분
  -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규제개혁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라는 인식 확산이 요구
  - 사회통합을 위해 법과 원칙을 확립하며 폭력 거리시위 및 노조의 불법 행위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함

## < 참고 > 해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

### 1. 성공사례1 : 미국 - 위기 상황에서의 결집, 강한 리더십, 제도 구축

- 당시 레이건 정부는 1970년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책, 공공부문 지출 확대 등을 배제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도
- 1978년 오일쇼크(Oil Shock)를 전후해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침체 구도가 길어졌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띠게 됨

< 1980년 미국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성장률 >

1980년 2분기	1980년 3분기	1981년 2분기	1981년 4분기	1982년 1분기	1982년 3분기	1982년 4분기
-7.8	-0.7	-3.1	-4.9	-6.4	-1.5	0.4

- 작은 정부의 기조를 지키며 노동부문 유연화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통해 미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
    - \* 1981년 미 연방항공소속 관제사 1만 3,000여명이 전면 파업했을 때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 1,500여명을 집단 해고
  -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으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양
- 갈등해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 각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미국의 대표적 갈등관련 해결법 >

행정분쟁해결법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사용을 의무화, 각 기관의 고위관료를 분쟁해결가로 임명해 화해, 조정 등을 적극 활용할 것 규정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합의를 형성하게 하는 자발적 과정을 규정. 정부도 이해당사자로 참여

-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을 추구하는 당사자간 해결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
- 사회 갈등을 전담하는 갈등관리기구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유도

- 각 분야·사례별로 다양한 갈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을 강화
- 여러 인종, 넓은 국토 등 갈등의 유발요인이 많아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갈등관리기구 운영을 통해 해결

< 미국의 갈등관리 기구 >

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그룹 (The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	ADR(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의 촉진을 위한 정부기관 간 위원회
분쟁해결실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무부의 ADR 활용 조정 및 총괄. 어떤 사건에 어떠한 분쟁 해결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변호사들에게 자문, 지원하는 역할
갈등예방 및 해결센터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CPRC)	농림부와 환경보호청의 ADR 이용한 갈등관리기구. 농업, 환경 부문에서 분별있고 공정하며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국환경분쟁해결원 (U.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 환경영향분석, 합의촉진, 조정 등 교육훈련 제공.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동 등의 지원사업

- 당사자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적 갈등 표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 대응으로 갈등에 대처
- 지난 2005년 미국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C)의 불법 파업으로 시내 지하철 버스가 운영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
- 뉴욕주법원은 3일간의 파업에 대해 노조에 300만달러(약 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노조위원장에 징역 10일을 선고하는 등 강력 대처

## 2. 성공사례2 : 네덜란드 - 사회적 협약

- 1982년 노사가 사회적 협약인 「바세나협약(Wassenaar Agreement)」에 자발적으로 합의해 자율적인 위기 극복 노력 펼침
-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 이후 80년대 초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극심한 경제 침체 경험
- 1981년과 1982년 각각 -0.5%, -1.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는 등 위기 심화

-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자칫 사회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각 경제주체들이 모두 갖고 양보
- 잡세어링, 임금인상 억제 등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추구하고 동시에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게됨

< 바세나협약의 노, 사, 정 내용 >

노측 사항	임금인상자제, 물가연동제 유보(실질소득 9%감소 효과),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수용
사측 사항	노동시간 단축(5%),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세어링)
정부측 사항	사회보장 정책 남발 자제, 감세정책, 임금교섭 불개입

**3. 실패사례1 : 아르헨티나 - 포퓰리즘적 분배정책, 리더십 부재**

- 20세기 초,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 경제번영을 이뤘으나 후안 페론(Juan Peron) 정권의 복지정책 이후 경제적 몰락
  - 페론은 ‘사회정의’를 내걸고 외국자본 추방, 철도와 전화 등 국가 기간 산업 국유화, 초등교육 혜택 확장 등 좌파·복지정책 실시
  - 1947년 노동자 임금을 전년대비 47% 인상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 여성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지위 상승 등 정책 시행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공업화 등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패
  - 복지정책, 임금인상 등은 경제 성장 둔화 등 ‘복지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결과만을 낳았음

< 페론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변화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외환보유고	5.61	2.66	4.45	2.53	1.33	1.60	1.52	0.85
수출	16.3	10.4	11.8	11.7	6.9	11.3	10.3	9.3
수입	15.6	11.8	9.6	14.8	11.8	8.0	9.8	11.7
무역수지	0.7	-1.4	2.2	-3.1	-4.9	3.3	0.5	-2.4

\* 단위 : 억 달러

## < 첨부 > 기업 대상 설문 문항 및 결과

문 1. 올해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십니까?

구 분	전체
1 매우 심각	15.0%
2 다소 심각	72.3%
3 별로 심각하지 않음	12.7%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5 잘 모르겠다	0%
계	100%

문 2. 올해 우리 사회 갈등을 야기한 최대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 분	전체
1 노사대립 심화	11.3%
2 정치/이념대립 고조	63.7%
3 빈부격차 심화	24.9%
4 지역간 대립 심화	0.1%
5 기타	0%
계	100%

문 3. 귀사 기업경영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갈등의 양상은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후진적 노사 문화 및 노동운동	30.8%
2 사회 내 정치·이념 대립	22.4%
3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계층갈등	16.4%
4 지역갈등(동서, 수도권↔비수도권)	3.4%
5 개발과 환경 보존 가치간 갈등	15.7%
6 기타	11.3%
계	100%

문 4.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노사갈등 심화가 불법 노동운동 야기	17.7%
2 이념, 빈부갈등 심화가 반기업정서 확산	19.0%
3 소모적 대립으로 국회, 정부 활동 지연	18.3%
4 국가신인도 저하로 국가, 기업 Image ↓	7.3%
5 기업경영(투자, 고용 등) 불확실성 심화	32.7%
6 기타	5.0%
계	100%

문 5. 사회갈등으로 귀사가 입은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매출액 감소	21.3%
2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진출 포기	12.3%
3 대외신인도 및 기업이미지 추락	19.7%
4 해외투자자 이탈 및 투자계약 무산	1.3%
5 신규채용 위축	10.3%
6 광고효과 감소	3.7%
7 기타	31.4%
계	100%

문 6. 내년에 우리 사회 갈등양상이 올해와 비교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구 분	전체
1 매우 더 좋아질 것	0%
2 다소 더 좋아질 것	14.6%
3 올해와 비슷할 것	59.7%
4 다소 더 나빠질 것	23.7%
5 매우 더 나빠질 것	2.0%
계	100%

문 6-1. 문 6에서 좋아질 것으로 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노사문화 개선	25.0%
2 이념갈등 해소	27.1%
3 빈부격차 완화	16.7%
4 과격, 폭력시위 문화 개선	10.4%
5 선진시민의식 성숙	20.8%
계	100%

문 6-2. 문 6에서 나빠질 것으로 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노사문화 악화	12.2%
2 이념갈등 심화	33.8%
3 빈부격차 심화	43.2%
4 과격, 폭력시위 문화 악화	2.8%
5 선진시민의식 미성숙	8.0%
계	100%

## 문 7.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 분	전체
1 선진노사문화 정립	12.1%
2 소모적 정치·이념갈등 해소	32.3%
3 정부의 소통노력(사회통합위원회 등)	27.8%
4 엄정한 법 적용 및 공권력 강화	4.2%
5 사회안전망 구축	9.3%
6 대화, 토론 등의 시티즌십 강화	8.0%
7 정치구조 개편(개헌, 권력구조 개편)	3.8%
8 기타	2.5%
계	100%